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신용회복위원회
보도		7.2(화) 10:00부터 보도가능	배포	2019.7.2.(화)
책임자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변제호(02-2100-2610)		담당자	정태호 사무관 (02-2100-2612)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장 민영안 (02-750-1071)			고동현 수석 (02-750-1072)

**제 목 : 7.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 취약계층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감면을 최대 85~95%)하는 특별감면제도 시행
- 주담대 채무조정 설계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 상환유예 · 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채권자 수용가능성 제고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분야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기 발표

- ※ [18.12.21]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 ※ [19.1.17]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 ※ [19.2.18]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 그동안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7.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1.17, 2.18 발표) 과제별 추진현황>

대책 발표	세부과제	추진현황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활성화 방안 (1.17)	1. 서울회생법원-신복위 간 주담대채무조정 연계	1.17일 시행
	2.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 다양화	7.8일 시행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2.18)	1. 상각채무 감면을 상향 및 감면을 산정체계 개선	4.1일 시행
	2.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	7.8일 시행
	3.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9월 시행(예정)
	4.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9월 시행(예정)

[1]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가. 개선 취지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70~90%)하고 있으나,

* 일반채무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 차등적용

○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기간(통상 8년 이상)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 존재

○ 채권자 입장에서든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

-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

* 일정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복위 제도와 달리,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

나. 지원 대상

구분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장애연금 수령자	고령자(70세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소득·재산	소득 : 별도요건 없음 순재산 ≤ 파산면제재산 ¹⁾	소득 ≤ 중위소득 60% 순재산 ≤ 파산면제재산 ¹⁾	소득 ≤ 중위소득 60% 순재산 ≤ 파산면제재산 ¹⁾
연체기간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0년 이상
채무규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500만원 이하 ²⁾
지원내용	① 채무원금 80~90% 감면 ② (조정 전 채무원금 합산 ≤ 1,500만원時)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면책 (⇒ 최대 95% 감면효과)	① 채무원금 80% 감면 ② (조정 전 채무원금 합산 ≤ 1,500만원時)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면책 (⇒ 최대 90% 감면효과)	① 채무원금 70% 감면 ³⁾ ②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 면책 (⇒ 최대 85% 감면효과)

1) 파산절차시 채권자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서울특별시의 경우 4,810만원)

2) 신청당시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 합산 기준

3) 연체 10년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만 70% 감면율 적용. 나머지 채무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을 차등적용

①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6개월간 생활비 (1,110만원)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지역별 상이, 서울은 3,700만원)]

② **(고령자)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

**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③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

**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참고 : 2019년 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급여 수급기준 (단위:원)>

가구원	기초수급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기초수급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60%	장애연금	기준 중위소득
1인	512,102	682,803	1,024,205	배우자 없는 경우 : 1,220,000 배우자 있는 경우 : 1,952,000	1,707,008
2인	871,958	1,162,611	1,743,917		2,906,528
3인	1,128,010	1,504,013	2,256,019		3,760,032
4인	1,384,060	1,845,414	2,768,122		4,613,536
5인	1,640,112	2,186,816	3,280,224		5,467,040

다. 지원 내용

① **(특별감면을 적용)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 (단, 담보부채권은 제외)**

* 일반채무자의 경우 채무금액 대비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70% 감면을 차등적용

** 고령자·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신복위 협약개정 거쳐 9월 이후 시행예정

구분		종전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수령자	(채무원금 합산 ≤ 1,500만원)	90%	90%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70%	80%
70세 이상 고령자		70%	80%
장기소액 연체자		20~70%	70%

- ② (성실상환시 면책)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 분할상환약정이 6년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상환 필요

-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하여 적용

<취약차주 특별감면 지원예시>

- ◇ 채무원금 7백만원(상각채권 3백만원, 미상각채권 4백만원), 월소득 140만원인 (가용소득 4.7만원) 2인가구 고령자가 채무조정 신청

구분	현행	개선
조정후 채무액	490만원	340만원
감면기준	상각채권 70%, 미상각채권 0%	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실제 상환액	490만원(최종감면율 30%)	170만원(최종감면율 75%)
월상환금액×상환기간	47,000원×104개월	47,000원×36개월

[2]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가. 개선 취지

- 신복위는 '13년부터 연체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주택 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일반형: 상환유예(최대 3년), 분할상환(최대 20년), 약정금리 1/2 감면(하한 5%)

* 특례형: 상환유예(최대 5년), 분할상환(최대 35년), 약정금리 1/2 감면(하한 기준금리+2.25%)

-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를 일률 적용 ⇒ 금융회사는 부담이 큰 채무조정 수용* 대신 경매를 선호

* 신복위 주담대채무조정실적(건) : ('13)101 ('14)56 ('15)12 ('16)11 ('17)6 ('18)50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여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

* 금융회사 동의율 제고와 관련하여, 주담대 채무조정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감독규정 및 행정지도 개정안 기시행('19.6.4)

나. 지원 대상

- ☐ (일반형) ①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

* 불가피한 사정(예:직장, 부모부양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인정

- ☐ (생계형 특례) ①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③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 지원 내용

- ☐ (일반형)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

* 월소득에서 생계비 및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주담대 상환에 사용가능한 소득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적용 예시 : 기존 VS 개선(안)>

구분	기존	개선(안)
A형 (가용소득 ≥ 주담대 분할상환원리금)	·분할상환 : 최대 20년 ·거치기간 : 최대 3년 ·적용금리 : 약정금리 1/2 (하한 5.0%)	·분할상환 : 최대 20년 ·거치기간 : 미부여 ·적용금리 : 약정금리(상한 10%)
B형 (주담대분할상환원리금 >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		·분할상환 : 최대 20년 ·거치기간 : 최대 3년 ·적용금리 : 약정금리(상한 10%)
C형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		·분할상환 : 최대 20년 ·거치기간 : 최대 3년 ·적용금리 : (거치기간) 약정금리의 1/2 (기준금리 +2.25%p 하한) (상환기간) 약정금리(상한 10%)
※ 생계형 주담대 특례 가구	·상환기간 : 최대 35년 ·거치기간 : 최대 5년 ·적용금리 : 약정금리 1/2 (기준금리+2.25%p 하한)	기존과 동일

○ (A형)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 기존약정에 따른 주담대 월상환액 > 가용소득 ≥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최대 20년) 분할상환원리금

-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10% 상한)로 장기분할상환

- (B형) **상환유예**(최대 3년) +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최대 20년) 분할상환원리금 >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

-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상환 유예를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10% 상한)만 납부
-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 개시

- (C형) **금리 일시감면**(기준금리+2.25% 하한) + **상환유예**(최대 3년) +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 > **가용소득**

-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부여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금리감면**(약정금리 1/2, 기준금리+2.25% 하한)
-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 개시

□ (생계형 특례)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 유형 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오는 7.8일(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신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 과반수(채권금액 기준) 이상이 동의할 경우 성립

※ [붙임]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 현황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전화 문의방법 : ☎1600-5500 또는 ☎1397

권역	구분	주소
서울	서울 중앙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서울 관악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서울 광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서울 노원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
	서울 양천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서울 강남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인천·경기	인천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인천 북부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안양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김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제202호
	하남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빌딩 4층
강원	강릉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원주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무실동) 씨티타워 2층
	춘천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속초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조양동 633-1) 속초고용복지+센터 3층
대전·충청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61 충남빌딩 6층 301호
	당진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충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 충남도청사 3층

권역	구분	주소
부산·울산 ·경남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부산 사상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울산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진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거제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고현동 부산은행 3층
대구·경북	대구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서대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태화동 715-3)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경주	경북 경주시 동천동 755-8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포항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구미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광주·전라	광주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북광주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1~3호
	순천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군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목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제주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